

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 
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 
21-40-  
(의결, 공개)

---

#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

---

2021. 7. 22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순서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여건 및 평가 .....	2
III. 시사점 .....	4
IV. 산업별 일자리 전망 및 추진전략 .....	5
V. 정책과제 .....	11
VI. 금년도 추진과제 .....	23

# I. 추진배경

## ① 한국판 뉴딜 등 통해 저탄소·디지털 경제 전환 대응

- 저탄소·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**순 세계적 흐름**이자 우리 **경제성장과 안정**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**새로운 패러다임**
  - \* EU·美·日·中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및 Data·AI·5G 등 투자 계획 제시('19~'20)
-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, 2050탄소중립 등 **산업구조 전환 전략**을 발표하고, 저탄소·디지털 분야 **재정투자** 및 **제도개선**으로 대응
  - \* '25년까지 총사업비 160.0조원(국비 114.1조원) 투자, 일자리 190.1만개 창출 목표
- ⇒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향후 **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**할 것이라는 국제적 평가
  - \* (OECD)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것('20.12)
  - \* (IMF) 한국판 뉴딜은 경제의 디지털화·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적절히 설정('21.4)

## ②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·근로자·지역도 존재

- 한편,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**신산업·신기술 일자리**는 늘어나지만, **고탄소·노동집약 산업**의 정체와 축소라는 이면도 존재
  - \*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, 전기차 투자비용 확보 위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인력 5,000명 직원 감축 계획 발표('21.3.14)
-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**축소 또는 전환되는 에너지·제조 산업의 기업 퇴출, 근로자 실업, 지역경제 침체** 등 피해 집중 가능성
- 디지털 전환과정에 따른 충격이 준비가 부족한 **중소기업**과 **저숙련 취약근로자**에게 집중되어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 우려
- ⇒ 미온적 대응 시, 경제·산업구조 전환 지연, 사회적 갈등 등 **국가경제 리스크** 요인으로 작용

⇒ 기술·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·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, **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** 등에 대한 **선제적·체계적 지원방안** 마련 필요

## II. 여건 및 평가

### 1 [정부] 노동전환을 위한 체계적·종합적 지원 노력 미흡

- 그간 **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** 위한 분야별 대책 발표
  - \* 디지털·그린뉴딜('20.7),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('20.12), 제9차 전력수급계획('20.12),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('21.2) 등
- 이와 함께 전환과정의 **실업불안 완화** 위한 **고용안전망 강화** 및 정의로운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는 **제도적 기반 조성\*** 병행
  - \* ▲지역균형 뉴딜, ▲탄소중립법 제정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 추진, 탄소중립 쏠 출범 등
- 또한, 금년부터 **석탄화력 발전소 (내연)자동차 부품협력사가** 집중된 **일부 지역을** 중심으로 구직자 이·전직 지원을 위한 사업 개시
  - \* '21년 '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'에 4개 지자체(충남·울산 등) 선정
- ⇒ 다만,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산업별 피해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,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
  - \* "새로 만들어낼 일자리는 추산해 발표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는 정부 대책에서 빠져있는 현상이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"(K-뉴딜 주요언론 동향)

### 2 [노사] 사업 축소·폐지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

- **【使】** 내연기관·석탄발전 분야 사업축소·폐쇄를 우려하고 있으나, **기술부족·불확실성** 등 이유로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는 미흡
  - \* 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차 진출 장애 요인으로 기술·R&D(65%), 공급처·기술협력(48%), 자금(45%), 진출분야 불확실(25%) 등 지적(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태조사, '20.9~10)

#### ☑ 현장 목소리

- ▶ 전기차는 기존 내연차 대비 부품 수요가 30%이상 감소하므로, 엔진·변속기 부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협력업체의 축소·폐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(자동차 협력업체 I社)
- ▶ 석탄발전소 폐쇄 및 원전 가동 정지는 공기업 소속 발전사 근로자보다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가할 것(발전사 협력업체 S社)






- **【勞】** 사업 축소·폐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 확산 → **“예상치 못한, 준비없는”** 이직 우려

- \* 석탄화력 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90.2%가 향후 발전소 폐쇄시점을 모른다고 답변 (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불안 실태조사, '21.3~4)




### 3 (외국)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'공정한 전환' 정책 추진 중

□ 주요국의 경우 우리보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빨랐던 만큼, 가시적 피해가 발생하는 **석탄발전 중심**으로 지원체계 旣 구축

- \* EU('19.12월)·中(9.22)·日(10.26)·韓(10.28), 美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 제시
- \*\* 노사정 및 시민단체의 **참여**를 전제로, 정책지원을 위한 **법적 근거** 마련 후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

 <p>EU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(net zero) 경제 전환 목표 → 향후 <b>10년간 1조 유로 투자</b> 등 내용을 담은 '<b>유럽 그린딜 투자계획</b>' 발표('20.1)</li> <li>* (참여) 지방정부·사회적 파트너·NGO 등 참여하는 공정전환 플랫폼 구축</li> <li>* (예산)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피해가 큰 지역·부문 1천억 유로 투자</li> <li>* (법안) 기후법(2050 기후중립 목표 및 지원방안 등 법제화)</li> </ul>
 <p>독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계획 발표('19.7)</li> <li>* (참여) 연방·주정부·사회단체·학계 등이 참여하는 '탈석탄위원회' 구성('18)</li> <li>* (예산) 20년간 43억 유로 기업보상금 + <b>400억 유로 지역·근로자 지원</b></li> <li>* (법안) '탈석탄법' 제정('20.7), 기업·근로자·지역 지원방안 근거 규정 마련</li> </ul>
 <p>캐나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발표('16)</li> <li>* (참여)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정부+노동자+NGO 등 참여하는 TF 구성</li> <li>* (예산) 5년간 <b>3,500만 캐나다 달러</b> 규모 노동자 전환센터 및 소득지원('19~)</li> </ul>
 <p>호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8개 화력발전소 폐쇄 → <b>연방 43백만+주 246백만 호주 달러</b> 투자('16년)</li> <li>* (근로자) 훈련·정신상담·조기퇴직 지원금/재취업장려금/신산업 취업지원</li> <li>* (기업) 산업전환 지원금/연구개발/창업지원 등</li> </ul>
 <p>미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석탄산업 근로자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<b>제도 법제화</b> 추진</li> <li>○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는 <b>지역사회</b>를 지원하기 위한 TF 구성 추진</li> </ul>

□ **全 산업의 무인화·자동화 등 디지털化**에 대응하여 재직자 및 구직자의 **디지털 역량강화** 지원 확대 노력도 지속

 <p>독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디지털 전환이 노동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및 학계·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<b>노동4.0 사회적 대화</b> 추진('16)</li> <li>* (예산) 디지털 기술 투자, 직원 교육 등에 총 2억 유로 지원('20.9~'23.12)</li> </ul>
 <p>일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근로자)디지털 인력양성 + (기업)사업재구축촉진 지원</li> <li>* (예산) 중소기업 대상 '사업재구축보조금' 지원('21.3~, 1조 2억엔)</li> <li>- 신분야 사업 전환 시 주요 경비(건물) 및 관련 경비(교육훈련비) 등 지원</li> </ul>
 <p>싱가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인화 고위험군 <b>산업 23곳*</b> 지정,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 대상 직원 재교육·생산성 향상 등 비용 지원</li> <li>* 정밀가공, 건축, 헬스케어, 금융서비스, 음식제조, 소매 등</li> </ul>

### Ⅲ. 시사점

#### 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부문에 대한 고려 필요

- 산업구조 전환은 유망산업의 성장뿐만이 아니라, 그 이면에서 **피해받는 국민들**(노동자·지역)의 **회복**이 전제되어야 지속 가능
- **'공정한 전환'**을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化 등 전체적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
  - 특히,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노동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**'공정한 노동전환'** 개념 도출

#### ② 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민-관 공동의 선제대응 요구

-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,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이 투입되면 **사회적 비용**은 커지고 효과는 저하
  - 산업·직종별 **없어지는 일자리**와 **생겨나는 일자리**를 **전망**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**교육훈련** 및 **전직지원 프로그램** 확충
- 민간의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재원 등을 결합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**민-관 협업체계** 구축

#### ③ 기업-근로자-지역 지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

- 피해부문 기업의 **사업전환**, 근로자의 **고용안정**, 지역의 **경제활성화**가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
  -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사업에 대한 **종합 컨설팅** 등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**패키지 지원 유도**
- 안정적·상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위해 **예산 프로그램**, **인프라**, **산업정책**과 연계 등 **범제화** 검토

#### ④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

- 산업구조 전환 단계부터 사회적 **협력** 체계 구축, 책임있는 주체 간 **정보공유**를 통해 **공동협력·공동책임** 원칙 실현

## IV. 부문별 일자리 전망 및 전략

### 1. 일자리 전망

- **[저탄소] 석탄화력발전·내연기관 자동차**는 既 확정된 사업 축소· 전환 목표\*에 따라 **단기적 노동전환 수요** 발생

\* (석탄화력발전) '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(24기 LNG 전환)

\* (자동차)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: '20년 2.8% → '25년 18.3% → '30년 33.3%

- **철강·시멘트·정유**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, **중·장기적 노동전환 수요** 발생 전망

구분	신산업 부문	제조 부문	발전·수송 부문
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재생에너지(태양광·해상풍력 등)</li> <li>■ 차세대 전력망(송배전망 확충 등)</li> <li>■ 저탄소 신산업(이차전지·저전력반도체·바이오·그린수소 등)</li> <li>■ 기후산업(CCUS·그린서비스·벤처 등)</li> <li>■ 순환경제(재생원료, 재제조 산업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철강</li> <li>■ 석유화학</li> <li>■ 시멘트</li> <li>■ 정유</li> <li>■ 반도체·디스플레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내연기관 자동차</li> <li>■ 석탄화력발전</li> </ul>
전환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재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·공정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축소 및 타 산업으로의 전환</li> </ul>
일자리 전망	신규일자리 창출 전망	단기적 사업 축소 및 노동전환 수요 제한적	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가시화

- **[디지털] 소 산업**에 '알고·넓게' 영향을 미치며, 특히 코로나로 인해 **비대면 수요와 결합**하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가속화

- 자동화·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**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** 및 유통·금융 등 **오프라인·대면서비스업**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

▲ **자동화** → (산업) 금속제품제조(뿌리산업), (직종) 장치·기계조작 및 조립, 단순노무 종사자

▲ **온라인** → (산업) 도소매·숙박음식 및 금융, (직종) 판매종사자, 금융사무원, 콜센터 등

구분	신기술 부문 <sup>①</sup>	삶의 질 부문 <sup>②</sup>	자동화·온라인 대체 <sup>③</sup>
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기전자</li> <li>■ 정보통신</li> <li>■ 전문과학서비스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의료(바이오)</li> <li>■ 보건</li> <li>■ 문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금속제품제조(뿌리산업)</li> <li>■ 자동차 제조</li> <li>■ 도소매(유통업), 숙박음식</li> <li>■ 금융보험 등</li> </ul>
직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AI·클라우드·빅데이터</li> <li>■ 로봇 분야 수요 확대</li> <li>■ IT+금융·의료·유통과 결합 → 新 직업군 출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돌봄 및 보건·의료 서비스 종사자</li> <li>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치·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</li> <li>■ 단순노무 종사자</li> <li>■ 판매종사자</li> </ul>
일자리 전망	신규일자리 창출 전망		상시적·점진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

※ ① 기술개발 등 통한 산업성장 속도가 노동대체 효과보다 큰 산업, ②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경제성장(소득증가) 효과 등으로 성장하는 산업, ③ 기술·노동 대체효과가 큰 산업·직종

① 저탄소化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전망

(1) (자동차) 내연기관 전용부품 생산 협력사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

※ (현황) ①완성차: 7개社 12.6만명 ②협력사: 9천여개社 22만명

(협력사 중 미래차 부품 생산기업은 210여개, 2.3% 수준)

※ (분포) 경기, 서울, 울산, 충남, 경남, 경북 등 전국에 산재

○ (목표) '30년 신차 중 수소·전기차 판매 비중 33.3%(60만대)

\* 수소·전기차 신차 판매 : ('20) 5.2만대(2.8%)→ ('25) 33만대→ ('30) 60만대(33.3%)

○ (전망) 전장부품, 배터리, SW 등 전동화·자율주행 부품 수요 증가 전망

- 엔진·동력전달장치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 중심으로 협력사 사업축소 등 통한 일자리 감소 전망

\* 순부채('19): 대형(자본금 1조 이상) 0.6조원, 중형(5천억원 이상) 1조원, 소형 7.6조원

\* 완성차社도 엔진 및 변속기 등 조립하는 생산라인 투입인력 감소 전망

-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중첩

○ (특징) 자동차 생산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비·판매, 주유·금융 등 분야 충격 동반 예상

\* '18년 기준 자동차 정비·판매 종사자 약 28만명, 주유·금융 종사자 약 26만명 수준 ('20년 자동차산업 직간접 고용현황 분석, 한국자동차산업협회)

< 참고: 미래차 전환에 따른 영향 >

▲ (부품감소) 내연기관차 2.5~3만개 → 전기차 1.5만개

\* 차종별 부품수(만개) : (내연기관) 2.5~3, (하이브리드) 3.2, (전기차) 1.5, (수소차) 2.3

▲ (대응상황) 부품기업의 81.6%는 미래차 대응계획 미수립

\* 미래차 대비여부(%) : (관련제품 생산중) 10.0, (개발중) 1.1, (계획 수립중) 7.2, (계획없음) 81.6

▲ (향후전망) 전기차 판매대수는 '25년부터 급증하여 '30년에는 글로벌 신차시장의 최대 28%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(Bloomberg)

※ 출처: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(한국자동차연구원, '21.3월)



## (2) (석탄화력발전) LNG 등 전환이 불가한 협력사 일자리 감소

※ (현황) ①발전사 : 6개사(발전공기업5+민간1)·58기, 종사자 약 5,600명

②협력사 : 원료운반, 보조설비 운전 등 종사자 약 8,000명

※ (분포) 충남 28, 경남 14, 강원 6, 인천 6, 전남 4

○ (목표) 전체 58기 중 28기 폐지(~'34), 이 중 24기 LNG 전환

\* ('21) 58기 → ('25) 55기 → ('27) 52기 → ('29) 45기 → ('31) 41기 → ('34) 37기

○ (전망) 발전사는 퇴직 등 자연감소·인력재배치 등으로 대응하나,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

- 특히, LNG 등 전환이 불가한 원료운반·저장 설비 등 수행하는 지역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 예상

\* 원료운반·저탄장, 환경설비(탈황 등) 근무 인력은 LNG 발전으로 재배치 곤란

## (3) (철강)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

※ (현황) ①제철·제강 : 69개사 3,671명 ②압연·압출제품제조 : 332개사 45,708명

③철강관제조 : 701개사 23,863명 ④기타 1차 철강제품제조 : 671개사 14,367명

○ (목표) 에너지 효율화 지속, 전로제강의 수소환원강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, '50년까지 획기적 공정혁신 추진

\* 수소환원제철: '22년 기술개발 착수 후 '40년까지 상용화 기술개발·scale-up, '50년까지 설비교체 단계적 추진(포스코·현대제철 등)

○ (전망)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크지 않음

- 공정혁신·스마트공장 도입으로 AI 인력 수요 증가, 단순관리직 인력 수요 감소 등은 퇴직 등 자연감소·인력재배치로 대응

## (4) (석유화학) 현재 진행 중인 설비투자 신증설로 단기적으로 일자리 증가, '30년까지 안정적 해외시장 유지 전망

※ (현황) 기초 유기화학물질제조업 : 114개사 15,353명

○ (목표) 탄소기반 연·원료를 바이오매스·수소·CCUS 통한 탈탄소기반 제품 생산·공정으로의 단계적인 전환 추진

○ (전망) 석유화학기업의 종합화학산업체로의 전환 추진중으로, 인적 구조에서의 가시적 변화는 제한적

- '40년 이후 공정전환 완료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 예상

### (5) (시멘트) 탄소중립에 의한 중·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

※ (현황) 시멘트 제조업 : 56개社 5,496명

- (목표) 고층화·도시화, 그린빌딩 대응 에너지효율화, 대체연료 사용, 석회석 원료대체 및 혼합재 비중 확대 등 추진
- (전망) 시멘트 분야 고용감소는 자연퇴직 등 대응, 신제품개발·폐합성수지 등 **순환자원 공급인력** 수요 증가 예상

### (6) (정유)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

※ (현황) 석유정제업 : 120개社 11,681명

- (목표) 바이오매스·수소·CCUS 통한 탈탄소기반 공정 도입, 사업다각화 추진으로 **新화학산업**으로 전환
- (전망) 고효율설비 도입 등으로 **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유지** 추진
  - 다만, '30년 이후 급격한 수송유·난방유의 전기·수소화 등으로 **일부 수요부진** 예상

### (7) (반도체·디스플레이) 디지털 전환·고기능화 진행으로 성장세 유지, LCD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은 일부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

※ (현황) ①반도체 제조업 : 245개社 26,511명

②액정표시장치 제조업 : ('16)159개社 70,159명 → ('19)133개社, 40,398명

- (목표) 단기적으로는 공정 효율화·고효율 설비교체로 대응
  -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저탄소 공정가스 개발 등 저탄소체제에 대응하는 **핵심 전자부품·제품 경쟁력** 유지
- (전망) 생산기지 이전·주력제품군 변화 外 **고용감소 요인** 없으며, 탄소중립 추진에 의해 **신제품 수요 확대는 기회요인**으로 작용

## ② 디지털化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감 전망

디지털화는 자동화·온라인으로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의 저숙련 직종 및 오프라인·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

- (산업) 자동화로 인한 금속제품제조(뿌리산업), 자동차 제조, 온라인화로 인한 도소매, 숙박음식, 금융보험 일자리 감소 전망

\* '18~'35년 연평균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/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전망

- (금속) 3.0/3.5, (자동차) 3.3/3.7, (도소매) 2.0/2.2, (숙박음식) 1.6/1.6, (금융) 4.0/4.6

- 특히,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·비대면 경제 급속도로 진전 → 오프라인·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감소 가속화

< 참고: 비대면 소비 확산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>

▲ (업황) 서비스업 205개社 중 86.7%가 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

▲ (고용) 고용이 10~30%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.6%, 30% 이상은 8.2%

- 시기별로는 1년 이내 감소 27.2%, 1~2년 이내 25.4%, 3년 후 5.6%로 조사

※ 출처: 비대면 소비행태 확산과 서비스업계 대응전략('20, 한국은행)

- (직종) 단순·반복 직무를 수행하는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, 단순노무 종사자,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판매원 감소 전망

【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정도가 큰 5대 직종군 】

직업명	일자리 감소 사유	관련 기술
상점판매원	■ 무인점포·계산대 증가, 온라인 매장 구매·배송 확산	핀테크·AI
콜센터요원	■ 정형화된 고객문의에 대해 인공지능 챗봇으로 응대	AI·빅데이터
금융사무원	■ 오프라인 은행점포 폐쇄,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산	핀테크·빅데이터
검침(수금)원	■ 스마트그리드(Smart Grid) 및 원격화 통해 관리	IOT·빅데이터
단순제조종사원	■ 제품조립·불량품검사 등 업무 로봇·인공지능 등 대체	스마트공장

※ 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·미래직업연구팀('21)

- (규모별)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·습득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동화·온라인화 기술도입에 고용감소로 대응할 우려

\* 디지털기술 접근성(중소기업/대기업, %) : ('16) 46.4/76.3 → ('19) 50.1/82.9

- (시기별) AI 기술대체 측면에서 보면, 산업별 AI 상용화 시기에 따라 일자리 감소 시기\* 편차 발생

\* (상용화 시기) 정보통신·연구개발 → 전기전자 → 에너지 → 운수 順

\* 전산업 평균 AI 적용률은 '19년 30% → '30년 45%, '53년 100% 전망

## 2. 전략 : 노동전환 시급성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
### ① 저탄소 전환 대응

#### 자동차·석탄화력발전: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

- **[대상]** 에너지전환·탄소중립 등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축소·전환 및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(내연기관 자동차, 석탄화력발전 등)
- **[전략]**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⇒ 정책역량 집중+우수사례 도출
  - 기업의 사업재편·전환 + 축소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 강화, 지역별 고용위기 대응 등
  - 민간의 자발적인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대폭 보장

#### 철강·정유·시멘트 등: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

- **[대상]** 탄소중립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, 공정개선·기술개발 등으로 대응 가능하여 단기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제한적인 산업군\*
  - \*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, 정유, 반도체, 디스플레이
- **[전략]**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따라 선제적 노동전환 준비
  - 산업별 상시 고용전망·분석 및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전환·감소 전망 포착 시 선제대응 체계 가동

### ② 디지털 전환 대응

- **[대상]** 자동화·온라인(e-commerce)등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향후 상시적·점진적 노동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·직종군\*
  - \* ▲ 자동화 → (산업) 금속제품제조·자동차 제조 (직종)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, 단순노무 종사자
  - ▲ 온라인 → (산업) 도소매·숙박음식 및 금융보험 (직종) 판매종사자, 금융사무원, 콜센터 요원 등
- **[전략]** 근로자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상시적 직업전환 대비
  -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원활한 재진입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

## V.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정책과제

**정책방향:**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·노동자·지역 피해 최소화

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 정책지원 보강

新산업 분야		기존산업(고탄소·노동집약)		국가 경제
혁신성장 육성·지원 전문인력 양성·공급	+	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 지역 유망·대체산업 육성	=	포용적/지속가능한 성장 공정한 전환 실현

**추진전략:** 노동전환의 시급성·규모에 따라 전략적 대응 +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

<b>저탄소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[자동차·석탄화력발전]</b> 노동전환 수요가 크고 단기간내 발생 → 신속 지원 → (기업) 사업재편·전환 지원 + (근로자) 직무전환, 전직·재취업 지원 + (지역) 대체산업 육성, 위기지역 신속 지정</li> <li>○ <b>[철강·정유·시멘트 등]</b> 탄소중립 영향 가시화 / 노동전환 수요 증장기적 발생 → 산업·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+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</li> </ul>
<b>디지털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기업)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고용친화적 디지털화 지원</li> <li>○ (근로자)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, 평생직업능력 향상 지원, 고용안전망 강화</li> </ul>

### 「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」

▲ 중앙단위 거버넌스 및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 ▲ 법률 제정 ▲ 사회적 대화

	AS-IS : 사후적·개별적 대응	TO-BE : 선제적·종합적 대응
기업	사업전환 정보 및 인센티브 부족	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발굴 → 전략적 컨설팅 + 인센티브 강화
근로자	준비없는 실직, 개인이 고용불안 감당	직무전환·재배치+사전적 이·전직 준비, 국가-기업-근로자가 공동부담·완화
지역	사후적으로 고용·산업 위기 대응	선제적 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
거버넌스 전달체계	범정부 종합적 지원체계 부재 사업전환-노동전환 분절적 지원	(중앙) 거버넌스 구축 → 범부처 협업 강화 (지역) 사업전환+노동전환 연계 전달체계 구축
법·제도	법률·예산·인프라 등 미흡	법·제도 정비 / 사회적 대화 활성화

# 1. 저탄소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

## 자동차·석탄화력발전

### ① [사업전환]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재편·전환 지원

-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**전략적 수요발굴·관리 - 인센티브 확충 - 시장기능 강화** 등 정책 틀 마련
  - ① (수요발굴) '사업구조개편 지원협의기관\*' 구성, 데이터 분석 등 통한 **수요기업 발굴** +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컨설팅
    - \* 대한상의·KIAT·중진공·정책금융기관 등 참여, 수요기업 정보공유 및 기관별 맞춤형 지원
  - ② (인센티브) R&D·자금융자·규제완화 및 **사업재편 전용펀드 신설** (500억원 목표) 등 사업재편·전환 기업 인센티브 강화
    - \* ▲(R&D)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&D 확대 ▲(자금) 사업전환 자금 융자 규모 확대 ▲(규제·세제) 규제특례 대상·과세이연 확대 ▲(판로) 온·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
  - ③ (시장기능 강화) M&A 활성화 위해 **금융·세제·규제완화**
    - \* ▲(금융) 모태펀드, 기업구조혁신펀드, M&A플랫폼 등을 통해 M&A 지원 활성화 ▲(규제완화)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 검토
  - ④ (실효성 제고) 디지털·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 근거 마련, 사업전환 계획기간 장기화 및 **공동 사업전환 신설** 등 검토

☞ 「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」을 통해 자동차 분야 등을 포함한 **수 산업분야에서의 사업구조개편 지원 촉진**

### ② [노동전환] 재직자 역량강화·직무전환 + 전직·재취업 준비 지원

#### (1) 재직 중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

- [선제대응] 근로자가 재직 중에 미래차·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**기업 등 인센티브 강화**
  - ① (기업) 재직자 **장기유급휴가**를 통해 사업주 훈련을 제공한 기업에 **인건비 부담완화** 등 인센티브 제공(「장기유급휴가 훈련」 확대, ~25년 4만명)
    - \* 현재 경남도에 시범운영 중인 '장기유급휴가 훈련'을 확대 적용 → 기업에게 훈련 기간 중 인건비(최저임금×150%+주휴수당), 훈련비 등 지원

② (재직자) 근로자 수요조사 통한 상시 훈련과정 개설 인정\* 및 훈련비 자부담 면제(「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」 신설, ~'25년 10만명)

\* (現)직업능력심사평가원연 2회 훈련과정 승인 → (改) RSC에서 근로자 수요조사 통해 상시 승인

③ (훈련기관)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통해 미래차·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·고급훈련 개설시 훈련단가 상향 지원

□ (민관협업) 자동차 ISC 등 산업별 협·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훈련수요 발굴 + 우수 훈련시설 공유 ⇒ 민간 중심 체계적 훈련 지원

① (대기업)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공동훈련센터 대비 지원수준 및 범위 대폭 확대

\* (지원) '저탄소디지털 전환 훈련의 경우 최대 39억원까지 시설비 등 지원(기존 20억원)

\* (범위) 창업지원교육·경력재설계 교육 등 인정

② (지역산단) 지역 훈련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대학·연구원 등 활용한 「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」 신설(~'25년 35개소)

\* '21년 공동훈련센터는 전국에 212개 既 운영 중(대중소 72개, 지역형 69개, 전략분야 71개)

③ (대학) 미래차 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진단·정비 등 현장 기술훈련을 위한 미래차 현장인력양성 권역별 전문대학 확대

-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·대학 등을 활용한 미래차 사업재편 기업 연구개발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 검토

\* 미래차 분야 사업재편 기업 연구개발 실무자 대상 기초·응용·심화·실습과정 운영

- 한국발전교육원 등 자체 훈련기관 등 통해 석탄발전 협력사 근로자 대상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교육과정 운영

\* '21년 협력사 근로자 190명 교육 진행 중('22년 교육계획 '21년말 확정)

□ (노사상생) 사업재편·전환 승인 기업 대상 인사·노무관리, 산업 안전 등 노사협력 컨설팅 및 파트너십 활동 지원

① (고용안정)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·고용유지 등 조치 시 고용환경개선 등 지원('22년 「고용안정 협약지원금」 신설)

\* 기숙사(월세)·통근버스, 사업재편 교육훈련 시설·장비, 사내복지 편의시설 등

② (노사훈련) 노동조합이 훈련수요를 파악하고, 사용자 단체가 훈련 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업형 훈련 시 지원 우대

\* 21년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 시범운영 실시

## (2) 불가피한 인력 조정 시 사전 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

- **[사전 전직준비]** 이직 예정자가 근로시간 단축, 기업 자체 전직 지원서비스 등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
  - ① **(근로시간 단축) '전직 및 재취업 준비'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\* 지원**
    - \* 임금감소보전금, 대체인력 인건비, 간접노무비 등
  - ② **(재직자 전직지원)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\* 제공 시 비용 일부 지원('22, 「노동전환 지원금」 신설)**
    - \* 생애경력설계 지원, 전직준비 컨설팅, 취업 상담·알선 등
    - 중장년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 1,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·보급 지원 확대
- **[재취업지원]** 불가피하게 이직이 발생한 경우 전직훈련 및 채용 보조를 통해 신속한 재취업·창업 유도
  - ① **(전직훈련) 자동차 ISC 신설('21.下) 및 전기·에너지·자원 ISC 역할 강화 등 통해 전직 수요조사 및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**
    -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·중장년·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 확대 및 교육 인프라 구축(~25년 1.7만명)
  - ② **(훈련 중 지원) 석탄화력발전, 내연기관 자동차 이직자가 생계비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, 저금리(연 1%) 생계비 대부 지원**
    - \* (대상) 가구원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, 소득 100% 이하 (지원 월 200만원 1인당 2,000만원 한도)
  - ③ **(채용보조) 석탄화력발전,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이직자로서 재취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**
  - ④ **(창업지원) 미래차 배터리·태양광 분야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및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추진**
  - ⑤ **(그린일자리) 유망 환경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원·현장실무연계교육 등 고탄소분야 이직자의 녹색융합기술인재로의 전환 촉진(~25년 2만명)**



### 3 [지역전환]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

#### (1)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 유망·대체산업 육성

□ [유망산업] 지역별 미래차·신재생 에너지, 녹색산업 육성 지원

① (상생형 일자리) ①신규 선정지역('21.2) 미래차 산업전환 지원\*  
②기 선정 지역 R&D 등 지원\*\* 강화

\* (군산)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, (부산) 전기차 구동유닛 기술 확보

\*\* (광주) SUV 기술개발, (밀양) 뿌리산업 친환경화, (횡성) 전기화물차 기술개발

② (산단 대개조) '21년 예비선정('21.3) 산단 대상 미래차 전환 위한 제조혁신·리모델링·환경개선 등 사업 패키지 지원

\* '20년 5개(대구·경북·광주·인천·전남) → '21년 5개(경기·경남·부산·울산·전북)

③ (녹색융합클러스터) 5大 녹색산업 분야\* 연구개발-실증-사업화 쉼 주기적 지원 위한 거점단지 조성('20~'25)

\* 청정대기(광주), 생물소재(인천), 수열에너지(춘천), 포스트 플라스틱(부산), 폐배터리(포항)

□ [대체산업] 석탄발전 폐쇄 지역 대상 LNG발전단지 조성, 수소·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 및 대체산업 육성 검토

\*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일자리 전환감소 분석 및 전환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(~'21.11월)

#### (2) 지역의 고용 위기 징후 발생 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

□ [선제대응] 지역 주도로 기업활력·고용안정 선제적 지원

① (지역산업 위기예방) 지역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위기 사전 예방프로젝트\* 추진, 사업전환·다각화, 신산업육성 등 지원

\*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와 연계하여 산업 위기 前 선제대응 프로젝트로 추진 ('22년 지역산업 잠재위기대응 프로젝트사업 신설)

② (고용안정 선제대응)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력산업 등 노동자 재취업 지원·고용촉진 등 사업 발굴 시 패키지 지원

\* '20년 5개 지자체·390억원 → '21년 4개·633억원

○ 석탄발전 및 자동차 분야 고용안정 및 신산업 육성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및 지원 강화

**【 '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선정 지자체】**

지역	산업	지원계획
충남	석탄발전·자동차	보령1·2호기 폐쇄 이·전직자 인력양성·취업지원 등
울산	자동차부품	내연차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, 자동차 분야 창업지원 등
광주	가전·자동차부품	사업화(시제품·마케팅 등) 및 공정·품질개선, 이직자 전문인력 양성
부산	자동차·조선	친환경 부품기업 전환을 위한 기술·사업화 지원

- **【위기지역 지정】** 발전소·자동차 협력업체 집중지역 산업·고용 모니터링 통해 위기징후 포착 시 **고용·산업 위기지역** 신속 지정

\* (고용위기지역) 노동자 고용유지, 직업훈련, 일자리 창출 등 지원(고용부)  
 \* (산업위기지역) 기업·소상공인 금융·세제 등 지원(산업부)

**철강·정유·시멘트 등**

**① 【공정한 산업전환】 고용안정을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**

- **【산업】** 탄소중립·디지털 전환 목표에 따른 산업별 구조 전환 전략 수립 시, **고용안정 방안 반영** 및 업계와 소통·협력 강화
  - 저탄소·디지털 산업 전환 정책이 **고용에 미치는 영향**을 평가하고, **고용친화적 전환**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제언
    - \* '고용영향평가' 통해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(22~)
- **【기업】** 친환경·저탄소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기술 분야 등에 대한 **사전 컨설팅 제공** 및 **지원사업 연계**를 통해 고용안정 추진
  - \* 상담 및 신청(그린기업 혁신 지원센터) → 녹색전환 진단 및 컨설팅 → 지원사업 연계
  - 각 부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심사·평가 기준에 기업 **고용유지 및 고용창출** 기준 최대한 반영

**② 【모니터링】 산업·지역별 고용전망 상시 분석**

- 「**노동전환 분석센터**」 통해 **고용전망 분석** 실시, 전망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통한 **대응방안 논의**
  - 예상치 못한 **구조전환 가속화** 등으로 일자리 전환·감소 전망 포착 시 선제적으로 **노동전환 지원체계**를 가동하여 신속 대응

## 2.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

### ① [재직자 적응]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

- **[디지털 전환]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**
  - ① **(인프라)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협업체계\* 구축 → 디지털 수준 진단 및 자금·교육·정보 + IT Tool 지원**
    - \* 중진공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스마트제조혁신 지원)
  - ② **(고용연계) 중소기업·소상공인 스마트化 지원 시 고용유지·창출 기업 우대 및 고용지원금 연계 강화**
    - \* (우대) 스마트 공장 구축·고도화 지원 사업, (연계)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, (컨설팅) 디지털 전환 교육·컨설팅 확대
    - 재도전 성공패키지·희망리턴패키지 수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DB 공유(중기부-고용부) 통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지원
- **[사업주 훈련 개편] 디지털 기술 적응 위한 훈련 프로그램 확대·강화**
  - ① **(특화훈련) AI·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기업 맞춤형 재직자 직업훈련을 위해 맞춤형 특화훈련(S-OJT)\*' 지원(∼25년 1,000개社)**
    - \* (훈련방식) 프로젝트 수행방식(PBL), (지원) 컨설팅 및 훈련과정 개발비, 훈련비 등
  - ② **(기초훈련) 디지털 기초 원격훈련을 사업주 직무훈련으로 인정, 훈련비 지원비율 상향조정(50→90%) 및 지원대상 대폭 확대(∼25년 400만명)**
- **[선도인재 양성]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인재양성 지원**
  - ① **(교육훈련)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기획할 변화인재 및 AI-기존산업 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**
    - \* 중소·중견 기업 임·직원 대상 고용친화적 디지털전환 기획 교육 확대(산업부)
    - \*\* 기존 산업분야 및 AI 기술 연계·활용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훈련 지원(과기부)
  - ② **(대학연계) 대학의 ICT 기술역량 활용, 지역 소재 기업 재직자 대상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 확대**

## 2 [구직자 적응] 상시적 직업이동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구축

□ [**소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**] 소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·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·재정적 기반 마련

① (제도) 소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, 직업·진로 상담, 경력개발 등 **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 확대**(‘21.下)

### <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개정 방향 >

- ▲ (법 제명)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→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
- ▲ (지원대상) 실업자·재직자 중심 →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활동 중인 모든 국민
- ▲ (직업훈련)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습득·향상 훈련 →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(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·직무기초능력) 습득·향상 훈련

② (지원)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**국민내일 배움카드**를 디지털 역량 등 **폭넓은 직업능력 개발 지원**으로 확대·개편(‘22년)

\* ‘21년 지원 중인 ‘K-디지털 크레딧’ 확대 추진(~‘25년 26만명)

③ (인프라) 개인별 다양한 **학습이력**(경력·훈련 등)을 저축·관리하여 전직에 **활용**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(‘22년)

□ [**디지털 실무인재 양성**] 공공·민간부문 디지털 인력양성 확대

① (민간: 혁신훈련기관) 디지털·신기술 **핵심실무인재 양성**(~‘25, 19.7만명)

② (공공: 폴리텍) SW 전문인력양성, 하이테크 등 신기술 **훈련 강화**, 디지털 관련 학과신설 등 **교육과정 개편** 및 교원 **역량강화** 병행

\* ‘AI+x학과 등 하이테크 관련 학과 신설·개편

□ [**고용안전망 강화**] **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** 및 **국민취업 지원제도 요건 완화**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적극 지원

① (고용보험) 전국민 **고용보험 로드맵**(‘20.12월)에 따라 적용대상 확대\* 및 저소득 특고 종사자·사업주에 대한 **고용보험료 지원**

\* (‘20.12~)예술인 → (‘21.7~)특고 12개 직종 → (‘22.1~) 플랫폼 2개 직종 → (‘22.7~) 기타 특고·플랫폼 종사자 → (~‘25)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자영업자 적용

② (국민취업지원제도) **폐업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**을 위한 참여요건 완화\* 및 **청년지원 사각지대 해소\*\***(‘21.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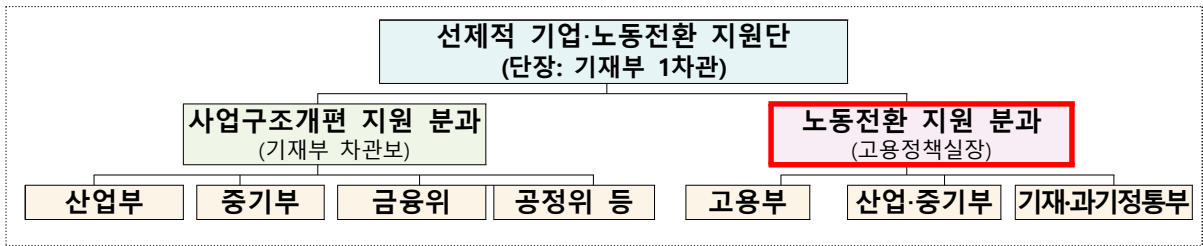
\* 연매출 1.5억원 이하 → 3억원 이하(‘21년 한시)

\*\* ▲ 재산기준 상향(3 → 4억원 이하), ▲ 저소득층 소득요건 완화(중위 50% → 60% 이하), ▲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 취업경험 요건 개선(2년내 100일 미만 → 취업경험 무관)

### 3. 제도적 기반 마련

#### ① [중앙]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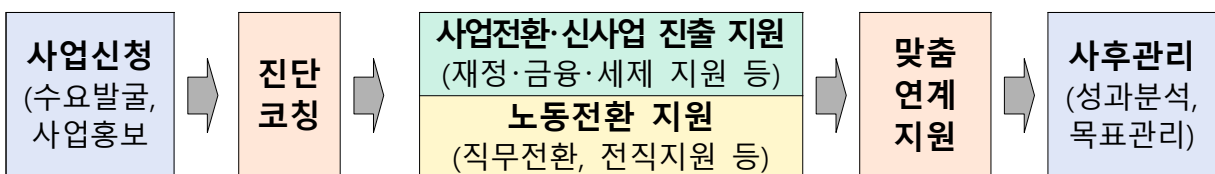
- **[범부처 협의체]** 사업재편·전환 및 노동전환 지원 통합 관리를 위한 「**선제적 기업·노동전환 지원단**」 구성
  - ① (구성)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체 하에 ①사업구조 개편 지원, ②노동전환 지원 목적의 두 개의 분과위원회 설치



- ② (기능) 사업 및 노동전환 지원체계 총괄 관리, 범부처 지원 체계 연계, 규제개선·애로사항 발굴, 사후관리 등

#### ② [지역: 전달체계]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 및 통합 컨설팅 지원

- **[기업발굴]** 기업의 사업재편·전환 및 디지털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노동전환 수요기업 발굴
  - \*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통해 발굴된 사업재편·전환 수요와 연계
- **[사업안내]** 발굴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기업의 선택을 지원
- **[컨설팅]** **전담 지원기관**(22년 신설)을 통해 사업전환·재편지원 + 교육훈련·전직지원 등 **통합 컨설팅** 제공
  - \* 기존 사업재편·전환 전담기관(중진공, 대한상의 등)에 노동전환 컨설팅·지원 기능 확충
- **[사후관리]** 노동전환 분석센터(한고원) 및 전담 지원기관 등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별 평가
  - 매년 **성공·실패사례 분석**을 통해 추가 지원책 발굴



### ③ [법제] 「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등

- [시책] 중앙부처·지자체 산업 육성·전환 정책 수립 시 공정한 전환 관점의 노동자·기업·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노력 규정
- [지원] 중앙부처·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, 사업재편·전환 지원 및 노동전환 지원 사업 간 연계강화
- [노사정 노력] 산업구조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노동 전환에 대한 노사정 노력 의무 부과

### ④ [인프라]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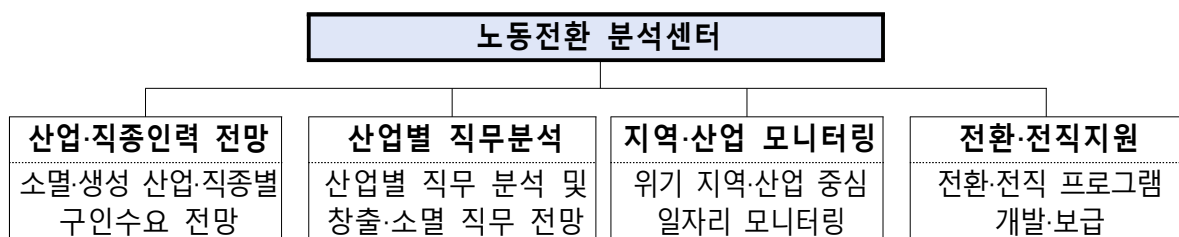
#### (1) 관련 법·제도 정비(‘21.下)

- [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 확대] 사업범위를 기존 직무훈련 지원 중심에서 직업·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등으로 확대[직능법 개정]
- [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]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서 ‘학업’의 사유에 ‘전직을 위한 재취업 준비’가 포함하도록 확대 [가이드 개정]
- [사업주 직업능력훈련 활성화] 최소훈련시간 제한 단축, 사전 훈련과정인정 폐지, 직무관련성 범위 확대 등[직능법 시행령·고시 개정]

#### (2) 「노동전환 분석센터」 설치

※ 한국고용정보원 內 설치

- 산업·직종별 인력수급 전망, 산업별 창출·소멸 직무분석 및 전망, 지역·산업 모니터링 등 수행하는 「노동전환 분석센터」 설치(‘22)
  - 산업·직종별로 소멸·생성되는 일자리 규모를 전망 → 매년 「산업·직종별 노동전환 수요전망」 발표 추진
  - 소멸→생성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 개발지원



## 【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가상사례 】

【사례】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기업인 A社は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으나, 정보 부족으로 전환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기술과 자금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애로가 있음. 재직자들은 사업주가 사업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기차 부품 생산 역량이 없는 본인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

- ① **(수요발굴)** '사업구조개편 지원단'\*에서 완성차 업체 공급망(Supply Chain) 데이터 분석, 기업여신 현황 분석 등 통해 A社 수요 사전 파악

\* 대한상의, 산업기술진흥원(KIAT), 중소기업진흥공단, 정책금융기관, 산업별 협단체 등 참여

- ② **(진단)** 사업재편·전환 지원기관(중진공 등)이 A社 상황진단을 통해 사업 재편·전환 필요시점, 제도 및 정책금융 지원대상 적격성 여부 등 진단

- ③ **(컨설팅)** 사업재편·전환 지원기관이 A社 진단(재무상태·수요 등)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및 컨설팅 실시

- 사업재편·전환 방향 수립·구체화 컨설팅 + 근로자 직무전환·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전환 컨설팅 통합 제공

\* ▲(사업재편·전환) 사업재편 승인 활용 안내 → 사업재편 전용 R&D, 사업전환 자금 컨설팅

▲(노동전환) 재직자 장기유급휴가훈련, 고용안정협약지원금, 일터혁신컨설팅 제안

- ④ **(패키지 지원)** 사업재편·전환 + 노동전환 지원사업 패키지 지원

- 사업재편 전용 R&D, 사업전환 자금 지원받아 기술개발 및 공정 증설
- 총 근로자 20명을 4차례로 나누어 전기차 분야 장기유급휴가 훈련 실시, 유급휴가 시 발생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 완화
- 노사간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, 사업재편 교육시설·장비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
- 공정이 전환됨에 따라 근로시간, 임금체계 재설계를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

## 4. 사회적 대화 활성화

◆ **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**

□ **[산업 단위]**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 개시('21.下~)

① **산업별 위원회\***(예 : 자동차, 석탄화력발전) 구성 등 검토

\* 산업단위 노·사·정 + 전문가·지자체·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 참여

② 산업별 위원회에서 **산업구조 전환 전망 및 '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'** 논의 및 의견수렴

③ 논의 결과를 토대로 **노사 협력 원칙, 정부 지원방안** 등을 포함한 **노사정 합의\*** 도출 추진

\* (예)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('20.7.28) → 코로나19 고용충격 해소를 위한 해고·분규 자제 등 노사 노력 및 정부지원 방안 포함

□ **[지역 단위]** 주력산업이 사업재편·전환 과정에 있는 지역에 대해 **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 상생·협력적 대안모색 지원**

\* '21년 159개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·운영 중

○ 사업재편 관련 **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논의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** (고용창출, 고용유지) **모델 개발 및 구체화 지원**(컨설팅)

\* (예) '20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·충남·부산 등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

□ **[현장 갈등예방]**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사업재편·전직 과정에 **노사갈등 현황 모니터링 및 갈등관리** → 필요한 지원금 지원 연계



## VI. 금년도 추진계획

- ◆ 내년도 예산을 통해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가동된다는 점 고려, 금년 하반기에는 **기정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**하여 선제적 대응

### ① 現 가용수단 활용 →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 집중 지원

□ 폐지가 예정된 **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** 및 인력축소 우려가 있는 **자동차 부품사, 도소매업** 대상 밀착 지원

#### ① (석탄화력발전) 폐지(예정) 석탄화력발전소\* 소재 지역에 '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' 구성, 구직자 대상 집중 서비스 제공

\* ①보령1·2호기 폐지('20.12) ②삼천포1·2호기 폐지('21.4) ③호남1·2호기 폐지('21.12)

- 발전사+협력사+지방 고용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이직자 실시간 파악 및 찾아가는 생계안정·구직활동 지원

\* 예) 발전사협력사 및 고용보험 DB 등 통해 이직(예정)자 명단 확보 → 이직자 대상 문자 발송 및 심층상담 통해 희망업종 조사 → 직업훈련 연계, 집중 취업알선 등 지원

#### ② (자동차) '21.7월 자동차 ISC\* 발족 → 관계부처(고용·산업부)와 협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 모니터링 + 전환 단계별 유형화

\* (구성) 자동차연구원, 자동차산업협회(완성차), 자동차산업협동조합(협력사) 등

(역할) 산업현장 모니터링+기업별·직무별 인력이동 추이 분석 및 훈련수요 파악 등

- 既 전환, 전환중, 전환예정 등 유형에 따라 기업재편·전환 지원 + 고용유지·직업훈련·전직지원 프로그램 집중 연계

▲ (既 전환) 집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+ 채용지원 서비스 + 채용장려금

▲ (전환중) 고용유지지원금 + 직업훈련 + 전직지원 프로그램

▲ (전환예정)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적용을 위한 사전컨설팅

#### ③ (도소매업)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상점 전환,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등 디지털화 적극 지원

-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재직자의 이·전직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수요 파악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지원

※ 비대면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전환이 빨라진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TF\* (일자리쫓, '21.7월 발족) 논의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책 마련

## ② 노동전환 사례 분석 및 모범 사례 구축

- 既 노동전환 사례분석(~9월) → 추가 지원책 발굴 등 정책 환류
  - 산업 전환 과정\* 및 기존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 + 「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」 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 사전분석
    - \* (전환과정) 전환배경, 전환내용, 전환 프로세스, 노동자 증감, 전환 전·후 비교 등
- 전환 모범사례 구축 → 他산업·기업으로 확산
  - (증양)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스마트 공장 도입기업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우수사례 발굴 → 모델화하여 보급
    - ▲ (사업재편 승인기업) 202개소, ▲ (스마트공장 도입기업) 1.6만개소
  - (지역)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→ 全 지역노사민정협의회(159개소) 공유
    - ▲ (부산) 노사민정 주도로 전기차사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부산형일자리 모델 마련협약 체결
    - ▲ (강원) 노사민정 협약, 공론화를 통한 이모빌리티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·추진 지원

## ③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사전준비 →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

- 금년 하반기 內 사전 수요발굴 및 인프라 구축 등 준비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노동전환 지원사업 즉시 시행
  - ① (홍보) 지원제도 시행 전 산업별 협·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,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제도 및 참여방법 안내
  - ② (수요발굴) 관계부처 및 협·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, 사업전환+노동전환 수요 기업 사전 발굴 → 지원사업 사전컨설팅
    - \* '22.1월 이후에는 '노동전환 지원센터'에서 수요발굴 및 컨설팅 기능 수행
  - ③ (인프라구축) 노동전환 분석센터, 노동전환 지원센터 개소 지원 및 업무 담당자 매뉴얼, 기업용 활용 가이드\* 등 사전 준비
    - \*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'공정한 전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' 마련
  - ④ (여건조성) 금년 하반기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국회 제출 및 사회적 대화 개시 → 정책추진 여건 조성

유형	분야	과제	일정	부처
저탄소 전환 지원 (자동차·석탄 등)	근로자 전환지원	▶산업구조 대응 등 특화 훈련과정 신설·운영	'22.1분기	고용부
		▶유급휴가훈련 확대 시행	'22.1분기	고용부
		▶공동훈련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수준 확대	'22.1분기	고용부
		▶노사 협업형 훈련과정 운영	'22.1분기	고용부
		▶미래차 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운영	22.1분기	중기부 등
		▶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 개시	'22.1분기	고용부
		▶노동전환 지원금 지급 개시	'22.1분기	고용부
		▶자동차 ISC 설치	'21.3분기	고용부
		▶고용촉진장려금 지급	'22.1분기	고용부
	지역지원	▶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신규 지정	22.1분기	고용부
저탄소 전환 지원 (철강 등)	산업전환 전략	▶「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」 수립 등	'21.4분기	산업부 등
	평가	▶산업구조 전환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	'22.1분기	고용부
	모니터링	▶산업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	'21.4분기	고용부
디지털 전환 지원	재직자 적응지원	▶사업주 직업능력훈련 개편·시행	'22.1분기	고용부
		▶디지털 선도인력 양성	'22.1분기	과기부 등
		▶폐업 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훈련	'22.1분기	고용부 등
	구직자 적응지원	▶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	'21.3분기	고용부
		▶국민평생크레딧 시행	'22.1분기	고용부
		▶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 구축 개시	'22.1분기	고용부
제도적 기반	전달체계	▶기업수요 발굴(사업구조개편 지원단)	'21.4분기	산업부 등
		▶노동전환 지원센터 설치	'22.1분기	고용부 등
		▶사업별 컨설팅 및 패키지 지원	'22.1분기	고용부 등
	법률	▶「노동전환 지원법」 국회 제출	'21.3분기	고용부
	인프라	▶노동전환 분석센터 설치	'22.1분기	고용부
사회적 대화	산업별 논의	▶경사노위 등 통해 자동차, 석탄화력 발전 분야 사회적 논의 진행	'21.3분기	고용부 등